

여·야,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 정면 충돌

국힘 "이재명 수사에 보복" 비판
민주 "김건희 변호인 전략" 맞불
강혜경 "공천에 김 여사 힘 작용"
'김 여사 동행명령' 집행은 불발



이성윤, 장경태, 이근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뉴시스

여야는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야권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섭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은 "법치주의 사망 선언"이라며 검찰 해체 요구를 자초했다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들어오마자 법사위에서 결국은 또 맨날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 특히 검사탄핵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줄줄이 묶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패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된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검찰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존경하고 인정한다.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선, "늘 검사는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다"며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이제 70년의 수명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 희망도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음백, 주가조작, 양

평고속도로 의혹, 관저비리 공천의혹 같은 김건희 종합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는 "김 여사가 평소 지칭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고, 민주당 장경태·이근태·이성윤 의원이 참관을 위해 동행했지만, 경찰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집행이 불발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도걸 "국민연금·KIC, 러 증시에 4850억 물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1일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가 러시아 증시에서 4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의 러시아 증시 주식·채권 투자규모는 2021년말 3100억원에서 전쟁 후인 지난해 말 630억원으로 80% 급감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말 5893억원에서 지난해 말 4332억원으로 주식·채권 투자 규모가 26%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 증시에서 국민연금은 4330억원(6200만 달러, 당시 환



율기준)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도 러시아 증시에서 청산을 유보한 투자규모가 520억원(4000만달러, 당시 환율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전으로 하락하던 러시아 증시에서 2월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포지션을 청산할 시간은 충분했다"면서 "5000억에 가까운 나랏돈이 묶여서 생기는 기회비용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여객선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전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1일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 훈련을 18회 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했다.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

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여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화재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30년된 '행정체제' 개편...내달 말까지 의견수렴

호남권 등 5개 권역별 진행

정부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1995년 민

선자치 출범 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편 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

단체 구역변경,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지역 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말까지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중부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법무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동훈-이재명, 조만간 두 번째 회동 갖는다

회담 일정 추후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박정화 당 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알림

을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

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을 두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일 한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안전 70건 처리

광주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22건·동의안 46건·의견청취안 1건·규칙안 1건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21건)으로는 △의회운영위 '광주시의회 사무기

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행정자치위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 '광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에 산재 운영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 '광주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등 5건 △교육문화위 '시교육청 인구조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총 9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

문에 나섰다. 14일에는 서삼석·박희율·강수훈·박수기 의원이 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15일에는 박희율·최지현·박필순 의원, 16일에는 강수훈·박수기·채은지 의원, 17일에는 심철의·조석호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